



[해설] 부동산 전문가 분석 “하반기도 집값 오름다 하락요인 찾기 힘들어” 04



Economy

코스피	3217.95 (0.00)	코스닥	1028.93 (0.00)
금리 (연평균)	1.375 (+0.017)	환율 (원/달러)	1149.10 (+4.10) (9일)

코스피 고점 경신에도 코로나·인플레 ‘눈치’ 거래대금 300兆 급감

개미운동의 현주소

(上) 투자 난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증시도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개인투자자 사이에선 이전과는 달라진 움직임이 포착된다. 올해 2분기 증시 거래대금은 1분기보다 30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동학개미운동 ‘눈치보기’ 장제 대내외 불확실성 확산에 관망

2분기 거래대금 295조원 감소 일평균 거래도 절반 가까이 뚝 시총 회전율 22%로 11%p ↓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국내 증시의 주요 축으로 자리한 개인의 힘이 급격히 빠진 형국이다.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 주변 환경과 관련한 여러 요인이 충돌하며 ‘눈치 보기’ 장제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무시한 오름세를 보였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2분기 증시 거래대금 300조 ↓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증시 거래대금은 1705조 8175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2001조 289억원과 비교하면 295조 2114억원(-14.75%)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842조원대를 기록한 후 2월 582조원으로 급감한 뒤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일

평균 거래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월 42조 107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한 후 과열 현상이 진정되며 2월 32조원까지 줄어 들었고 이후엔 20조원 중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견지하는 정황은 느린 순환매에서도 나타난다. 손바뀜이 잦아들며 시총액 회전을 크게 낮아졌다. 시총 회전율은 시총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이다. 수치가 높아 질수록 거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증시 시총 회전율은 22.29%로 지난 1월 33.37%와 비교하면 11%포인트(p)가량 감소했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 투자자들이 종목, 업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나타난 결과다. 개인이 매수나 매도 등 특별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증시가 오름세를 땀음에도 시장에는 업종, 테마 등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뚜렷한 주도가 없이 종목 간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방향성이 불분명해지며 투기적 성격이 짙은 매매양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반복되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급등 현상이 대표적이다. 현재 ▲유진스팩5호 ▲유진스팩6호 ▲삼성머스트스팩5호 ▲하나머스트7호스팩 ▲신영스팩6호 등이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대어급 공모주 청약 등 시장의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가 끝나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느끼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6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경제계, 중대재해법 반발 “과잉처벌 우려”

정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기중앙회 “업계 요청 반영 안돼” 노동계 “경영책임자에 면죄부 줘”

정부가 지난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경영계, 노동계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중견·대기업을 막론한 경영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나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입장문에서 “정부의 시행령

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대표적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례선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99%가 오너이자 곧 대표여서 경영책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경영활동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

을 면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는 대부분이 오너이면서 경영책임자인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누가 경영을 하겠느냐며 ‘제정 불가’를 외쳤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아쉬움을 표명했다.

중견련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며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끝 없는 대기줄

국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24명으로 집계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관련기사 2, 3면) /뉴시스

수익성 개선... 삼성전자, 3분기 ‘더 기대’

삼성전자 호실적 행진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본격화한 가운데,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투자가 늦어지면서 규모적으로는 계속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 주가도 7만원대로 주저앉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CEO를 역임한 에릭 슈미트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대체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모두 대만 TSMC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TSMC 미국 공장이 대만 현지 공장만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수주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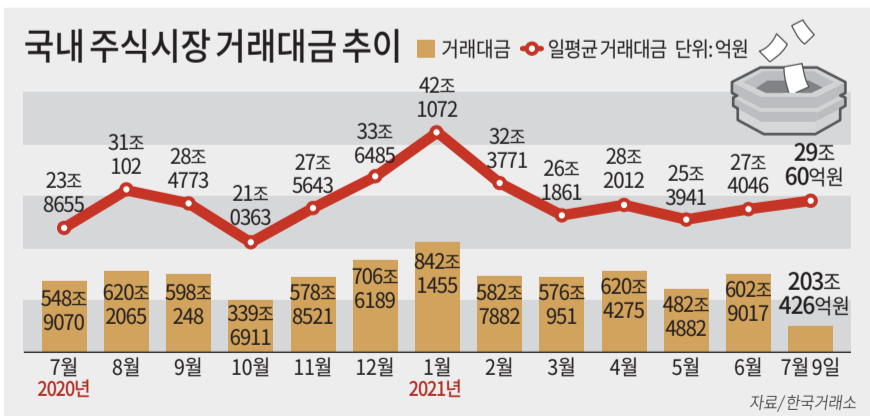
실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리는 하반기부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수기 진입에 더해, 5나노 공정

수율을 안정화하는 영향이다. 퀄컴의 4나노 공정 신제품인 스냅드래곤 895 수주도 성공하면서 TSMC와 미세 공정 경쟁을 대등하게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 부문에서도 확실한 실력을 증명했다.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대비 10%나 높게 나오면서 메모리 수율이 알려진 것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D램 수율이 웨이퍼당 100%에 가깝다는 추정도 나온다.

(8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文 대통령 방일, 이르면 내주 결론 날 듯
▲ 이재명 측 “전쟁 중에도 소비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절실” /사진 뉴시스

▲ 정부, 유엔에 “대북전단법, 국제인권 규약 허용 수준” 반박
▲ 유승민 “소상공인 눈물 안보이나? 허구한 날 80%~100% 싸움”



▲ 이낙연 “성평등 위해 여가부 책임 확대해야 할 시점” /사진 뉴시스
▲ 김정은 ‘반미 공조’ 시진핑 ‘대미 비난 자제’ ... 양측 입장차